

GOVP 12100020

R
355,0951
74277
2000

국방백서

2000

국 방 부



발 간 시



2000년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수많은 국내외 참전용사들이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쳤던 6·25전쟁 발발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분단 55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처음으로 개최되어 남북 화해협력과 냉전구조 해체의 기틀이 될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한반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과 '시드니 올림픽'에서의 남북한 선수 동시 입장은 세계를 감동케 하였고 남북교류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도 합의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에서 열린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양측은 '6·15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군사적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보장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와 함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추진해 나아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우리 군이 확고한 국방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될수록 튼튼한 안보의 뒷받침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남북관계와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 '우리의 영토와 영공, 영해를 침범하는 어떠한 외부의 위협도 이를 격퇴하고 응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 군의 기본임무와 사명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국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잊어서는 안될 원칙은 상대의 '기도'가

아니라, 상대의 '능력'을 보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은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의 군사능력을 비롯한 위협의 실체는 변한 것이 없는 만큼 군사 대비태세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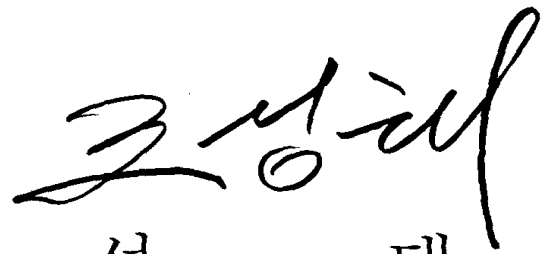
지난 1년간 우리 군은 '전투임무 위주의 선진 정예군 육성'을 위해 국방태세 확립, '선진 정예군 건설', '국민의 사랑과 신뢰 획득'이라는 세 가지 국방 중점과업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군은 어떠한 안보여건 하에서도 민족의 생존권과 국익을 수호하고 미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 과학화 군을 육성함과 동시에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주변국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방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며, 특히 '국방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금번 국방백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군이 추진하여온 정책들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보다 폭넓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국방정책에 관한 정보공개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본문에는 안보정세의 변화와 도전, 평화수호를 위한 국방정책과 태세, 우리 국방의 현황과 과제, 21세기를 대비한 국방개혁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등을 소상하게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안보분야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국방백서를 통하여 국방정책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확산되고,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한국군의 노력이 전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0. 12. 1



조성태

국 방 부 장 관

조

성

태

제1부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제1장 세계 안보정세	17
■ 제1절 안보정세 개관	17
■ 제2절 새로운 위협과 도전	17
1. 안보개념의 다양화와 초국가적 위협 확산	17
2.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위협의 확산	18
3. 지역 분쟁과 갈등	18
■ 제3절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	20
1. 유엔의 역할과 기능 확대	20
2. 전략 및 재래식 무기 감축	21
3. 안보대화 및 지역안보협력체제의 활성화	21
제2장 동북아 안보정세	23
■ 제1절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갈등	23
■ 제2절 주변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24
■ 제3절 주변국의 군사정책 및 군사동향	25
1. 미국	25
2. 일본	27
3. 중국	29
4. 러시아 연방	30
제3장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33
■ 제1절 북한의 실상과 일반정세	33
1. 북한의 내부정세	33
2. 북한의 대외정책	34
3. 북한의 대남정책	36
■ 제2절 북한의 군사정책 및 전략	37
■ 제3절 북한의 군사위협	38
1. 전쟁지도 및 군사지휘기구	38
2. 북한군의 편성, 장비, 배치	39
3.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수준	43
■ 제4절 주요 군사동향 및 위협평가	46
제1장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51

■ 제1절 국가목표와 안보정책	51
■ 제2절 대북정책	52
■ 제3절 국방목표와 국방정책기초	53
1. 국방목표	53
2. 국방발전 기본개념	54
3. 국방정책기초	55
제2장 전쟁억제를 위한 군사대비태세	57
■ 제1절 각군별 보유전력	57
1. 육군전력	57
2. 해군전력	58
3. 공군전력	59
4. 예비전력	60
■ 제2절 동맹국의 군사력과 증원전력	61
1. 주한미군	61
2. 증원전력	62
■ 제3절 우리 군의 대비태세	63
1. 조기경보체제 및 위기관리체제 유지	64
2. 평시 군사 대비태세	64
3. 전시 군사 대비태세	65
4. 민·관·군 통합방위 작전태세	66
5. 장병 정신무장 강화	67
■ 제4절 전투임무 위주 훈련강화	68
1.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68
2. 각군의 주요 훈련	71
제3장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74
■ 제1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75
1. 정전체제 유지와 판문점 정상급회담	75
2. 4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76
3.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국방장관회담	77
4.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82
■ 제2절 한반도 군비통제	83
1. 남북한의 입장	83
2. 우리의 군비통제정책 기초	83
3.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	85
제4장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외 군사정책	87
■ 제1절 한·미 동맹과 우리의 안보	87
1. 한·미 동맹의 배경과 의의	87

2. 한·미 안보협력 및 연합방위체제 발전	88
3.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89
4. 제반 한·미 현안의 해결 추진	90
■ 제2절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한 대외 군사교류 및 협력	91
1. 대(對) 주변국 군사외교 발전	91
2. 군사교류협력의 다변화 추진	94
■ 제3절 우리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96
1. 평화유지활동 개관	96
2. 평화유지활동 참여 현황	96
3.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99
■ 제4절 국제 안보협력 및 국제 군비통제활동 참여	100
1. 지역 및 다자 안보협력대화 참여	100
2. 국제 군비통제활동 참여	102

제3부 우리 국방의 현황과 과제

제1장 국방중기계획과 국방예산	109
■ 제1절 국방중기계획	109
1. 국방중기계획의 성격	109
2. 2001~2005 국방중기계획	109
■ 제2절 2000년도 국방예산	110
1. 일반회계예산	110
2. 특별회계예산	112
■ 제3절 적정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	112
제2장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위한 국방투자사업	114
■ 제1절 국방획득 정책방향	114
■ 제2절 국방획득업무 제도발전	116
1. 사업추진 과정의 공개	116
2. 의사결정 기준 및 절차의 명확한 설정 및 사전공지	116
3. 비용정보 검증능력 강화로 고가구매·예산낭비 의혹 방지	117
4. 업체와 군간의 정보교류 양성화	117
■ 제3절 국방투자사업 추진현황	117
1. 1999년 국방투자사업 결산	117
2. 2000년 국방투자사업 계획	118
■ 제4절 국내 방위산업 기반구축	120
1. 한국형 첨단무기 연구개발	121
2.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및 기반 강화	122

제3장 21세기를 대비한 국방정보화	125
■ 제1절 정보화 추진방향	125
■ 제2절 통합전 수행에 필요한 지휘통제체계 구축	126
1. 국방 통합C4체계	126
2. 합동 및 연합C4체계	126
3. 각군 전술C4체계	127
■ 제3절 효율적인 국방자원관리체계 구축	127
1. 국방CALS 및 EC체계	127
2. 자원관리 기능별 체계	129
3. 사무자동화체계 활성화	129
■ 제4절 실시간 정보유동이 보장되는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130
1. 국방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130
2. 국방정보통신망 보호대책	131
■ 제5절 장병 정보화교육	131
제4장 선진 정예군 운용을 위한 국방인력 육성	132
■ 제1절 정예 국방인력 육성 및 관리	132
1. 효율적인 인력관리	132
2. 국방 전문인력 육성	132
3. 여군인력 활용 확대	133
■ 제2절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발전	134
1. 선승구전(先勝求戰)의 강군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134
2. 국방대학교 창설	134
3. 민·군 교육교류 확대	135
제5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	136
■ 제1절 직업군인의 직업안정성 보장	136
1. 직업군인 처우개선	136
2. 군 숙소 확보정책 개선 및 내집마련 대책	136
3. 군인가족 생활여건 개선	137
■ 제2절 예비역 복지증진 및 예우향상	138
1. 직업보도 교육활동 및 취업지원 확대	138
2. 현역에 준한 복지수혜 확대	139
3. 예비역 기금확보 수익사업 추진	139
제6장 국가총력전 수행을 위한 동원태세 확립	141
■ 제1절 전시대비 동원태세 확립	141
1. 인력동원	141
2. 물자동원	142

- 제2절 향토방위작전 수행능력 향상144
 - 1. 향토방위 작전동원144
 - 2. 전투근무지원145
- 제3절 예비군자원 관리와 교육훈련145
 - 1.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145
 - 2. 교육훈련146



제1장 국방개혁의 추진방향151

- 제1절 추진 목표 및 중점151
- 제2절 추진 경과152

제2장 국방개혁의 성과153

- 제1절 군 구조 개편153
- 제2절 목표 지향적이며 투명한 방위력 개선155
- 제3절 합리적인 인사·교육제도 개선156
 - 1. 인사·교육관리 개선156
 - 2. 하사관 종합발전계획 추진156
- 제4절 국방관리의 혁신157
 - 1.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정보화체계 기반 구축157
 - 2. 군수조달의 투명성·경쟁력 확보158
 - 3. 효율적인 군수지원체제 구축158
- 제5절 군 사법제도 개선159
- 제6절 신 병영문화 창달159

제3장 향후 추진계획161

- 제1절 중·단기 개혁 지속추진161
 - 1. 군 구조 개편161
 - 2. 신 병영문화 창달161
- 제2절 국방정보화 추진162
- 제3절 국방연구개발 혁신163
- 제4절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164



제1장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구현	169
■ 제1절 공정한 병무행정 실현을 위한 노력	169
1. 올바른 병역문화 정립을 위한 제도 발전	169
2. 병무행정의 혁신 : '병무행정 Vision 21' 추진	173
■ 제2절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	174
1. 정보공개와 국방민원	174
2. 열린 국방과 국방홍보	175
■ 제3절 6·25전쟁과 국방	176
1. 6·25전쟁의 의의와 역사적 교훈	176
2.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176
■ 제4절 국방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181
1. 국방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81
2. 민간 전문가의 정책결정 참여 기회 확대	182
제2장 국민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183
■ 제1절 환경친화적 군 관리	183
1. 군 환경관리 기반 확충	183
2. 주둔지 환경오염 방지사업	185
3.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	187
4. 환경복구사업 전개	188
5. 작업환경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189
■ 제2절 지역사회와 군 시설	189
1. 군 사용 사유지 정리	189
2. 군용시설 이전 추진	190
3.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190
■ 제3절 대민 지원 활동	191
1. 군의 대민 지원사업 및 국책사업 지원	191
2. 재해·재난 지원활동	193

부 록

부 록 1	1999 세계 분쟁 현황	197
부 록 2	핵 보유국의 핵전력 현황	198
부 록 3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199
부 록 4	남북 경제지표 비교	201
부 록 5	북한 연도별 군사비 규모(1991~2000)	201
부 록 6	남북 군사력 비교	202
부 록 7	북한의 미사일 개발/제원	203
부 록 8	연합 및 합동훈련 현황	204
부 록 9	정전협정	206

부 록 10	남북기본합의서	219
부 록 11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부속합의서	221
부 록 12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부속합의서	224
부 록 13	6·15 남북공동선언<전문>	226
부 록 14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227
부 록 15	북한 핵문제 관련 경과일지	228
부 록 16	주요 국제 군비통제 협약/기구	232
부 록 17	한·미 상호방위조약	237
부 록 18	제31차 SCM 공동성명(1999.11.23, 워싱턴)	239
부 록 19	제32차 SCM 공동성명(2000. 9.21, 서울)	242
부 록 20	군사교류협력 현황(1995~2000)	244
부 록 21	아·태 지역 다자안보기구/참가국	252
부 록 22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 국방부 참가 현황(1996.1~2000.7)	253
부 록 23	전세계 PKO 활동현황	256
부 록 24	우리 군의 PKO 참여 현황	257
부 록 25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파병일지	258
부 록 26	연차별 정부재정과 방위비	260
부 록 27	2000년도 사항별 국방예산 현황	261
부 록 28	연도별 국방비 구성현황	262
부 록 29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263
부 록 30	2000년도 주요 군사장비 전력화 계획	264
부 록 31	방산관련 협정체결 현황	265
부 록 32	세계무기수출입 현황	266
부 록 33	우리의 연구개발 투자현황	269
부 록 34	주요국 국방연구개발 투자비 현황	270
부 록 35	민·군 겸용기술개발 과제 현황	271
부 록 36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 현황	272
부 록 37	국방교육훈련체계	273
부 록 38	군 정보화 교육 및 추진현황	274
부 록 39	국방기구도 및 국방인원 현황	278
부 록 40	6·25전쟁 참전국 현황	279
부 록 41	6·25전쟁 인명피해 현황	280
부 록 42	6·25전쟁 당시 남북 군사력 비교	281
부 록 43	6·25전쟁 당시 남북 경제지표 비교	281
부 록 44	군 환경시설 설치 중기계획	282
부 록 45	군 보유 토지 및 건물 용도별 현황	282
부 록 46	국회 국방위원회 소개	283
부 록 47	국방관련 주요법률 제·개정 현황	286
부 록 48	군 사법제도 개선	291
부 록 49	대민관련 주요 행정규제 정비 목록	292
부 록 50	국민의 정부 국방분야 국정과제 현황	293
부 록 51	주요 국방연표	296
부 록 52	역대 국방백서 소개	305

도 표

【도표 1-1】	미국의 동북아 지역 주요 군사력 현황	26
【도표 1-2】	일본의 주요 군사력 현황	28
【도표 1-3】	중국의 주요 군사력 현황	29
【도표 1-4】	러시아의 극동 지역 군사력 현황	31
【도표 1-5】	북한의 군사지휘체제	38
【도표 1-6】	북한 지상군의 주요 전투부대 구성비	39
【도표 1-7】	북한 지상군의 장비 보유현황	40
【도표 1-8】	북한 해군의 함정 보유현황	41
【도표 1-9】	북한 공군의 항공기 보유현황	42
【도표 2-1】	국방발전 목표	54
【도표 2-2】	한국의 육군 구성	57
【도표 2-3】	한국 육군의 병력/장비 보유 현황	57
【도표 2-4】	한국의 해군 구성	59
【도표 2-5】	한국 해군의 병력/장비 보유 현황	59
【도표 2-6】	한국의 공군 구성	60
【도표 2-7】	한국 공군의 병력/장비 보유 현황	60
【도표 2-8】	주한 미군사 조직	61
【도표 2-9】	주한미군 병력현황(인가)	61
【도표 2-10】	한국의 PKO 참여 현황	97
【도표 2-11】	상륙수부대 편성	97
【도표 2-12】	한국의 PKO 상비체제 참여규모	99
【도표 2-13】	PKO 해외교육파견 현황	99
【도표 3-1】	2001~2005 국방재원 배분	110
【도표 3-2】	2000년도 국방예산 규모	111
【도표 3-3】	2000년도 국방예산의 기능별 배분 현황	111
【도표 3-4】	GDP/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증가율 비교	113
【도표 3-5】	1999년도 국방투자사업비 용도별 현황	117
【도표 3-6】	2000년도 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	118
【도표 3-7】	첨단무기 연구개발 단계적 도약 개념	121
【도표 3-8】	국방 통합C4I 체계도	126
【도표 3-9】	국방 CALS목표 체계도	128
【도표 3-10】	국방자원관리체계 발전계획	129
【도표 3-11】	국방정보통신망 체계도	130
【도표 3-12】	여성인력 운영계획	133
【도표 3-13】	1999년도 예비역 재취업분야 현황	138
【도표 3-14】	10년 이상 근속 직업군인의 전역 후 취업현황	139
【도표 3-15】	예비군 응소기준시간	144
【도표 3-16】	예비군 자원현황	146
【도표 3-17】	예비군 훈련기간 및 세부 훈련내용	147
【도표 3-18】	2000년도 예비군 교육훈련시간	148
【도표 4-1】	계룡대 근무지원단	154

【도표 4-2】	국방대학교 창설	154
【도표 4-3】	국방정보화 추진목표	157
【도표 5-1】	학력 및 신체등위에 의한 병역처분기준	169
【도표 5-2】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병역이 감면되는 사유	169
【도표 5-3】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절차	170
【도표 5-4】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별 운영규모(2000년도)	172
【도표 5-5】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및 관리인원 현황(2000년도)	172
【도표 5-6】	정보공개 처리 절차	174
【도표 5-7】	민원처리현황(1999.12.31기준)	175
【도표 5-8】	관·군 환경협의회 구성체제도	184
【도표 5-9】	환경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계획	185
【도표 5-10】	군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1999년 기준)	186
【도표 5-11】	유류저장시설 토양오염검사 실시/계획 현황	188
【도표 5-12】	군 사용 사유지 정리현황	190
【도표 5-13】	군용시설 이전현황	190
【도표 5-14】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실적	191
【도표 5-15】	1999년도 농촌일손돕기 지원 현황	192
【도표 5-16】	1999년 대민지원 실적	194

약 어 표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국방과학연구소
ARF	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SOM	ARF-Senior Officer Meeting	고위관리회의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 국가연합
ATM	Asynchronous Transfer Mode	비동기 전송모드
AWACS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조기경보기
BCTP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사단/군단 단위 전투지휘훈련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업무절차개선
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생물무기금지협약
C4I(SR)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지휘, 통제, 통신, 전산 및 정보, (감시, 정찰)
CALS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System	지속적인 조달 및 수명주기 지원시스템
CBT	Computer Based Training	컴퓨터 보조교육
CCW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
CD	Conference on Disarmament	제네바 군축회의
CDIP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	연합방위증강사업
CERT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컴퓨터 긴급대응반
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한·미 연합군사령부
CFE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유럽재래식무기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정보화책임관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CISM	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	세계군인체육대회
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	연합권한위임사항
CPAS	Command Post Automation System	지휘소 자동화 체계
CRAC	Combined Rear Area Coordinator	연합후방지역조정관
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아·태 안보협력이사회
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전면핵실험금지조약
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협약
DPAMIS	Defense Procurement Agenc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국방조달관리정보체계
EC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EDI	Electronic Data Interface	전자문서교환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DO	Flexible Deterrence Option	신속억제방안
FE	Foal Eagle	독수리연습
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
FMP	Force Module Package	전투력증강
FTX	Field Training Exercise	군단급 야외기동훈련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CCS-K	Global Command and Control System-Korea	범세계 지휘통신체계(-한국)
GITIS	Government Integrated Technical Information System	정부통합정보기술관리체계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 미사일
IGCC	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세계분쟁 및 협력연구소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SG-CBMs	Intersessional Support Group o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신뢰구축에 관한 회기간 회의
I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IRBM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중거리 탄도 미사일
KADIZ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한국방공식별구역
KCTC	Korea Combat Training Center	파악화 전투훈련장
KDX	Korea Destroyer	한국형 구축함
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KIDA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한국국방연구원
KIST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과학기술원
KNTDS	Korean Naval Tactical Data System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
LAN	Local Area Network	지역전산통신망
MC	Military Committee	(한·미) 군사위원회
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MCRC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중앙방공통제소
MILES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다중통합레이저교전체계
MINURSO	UN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	서부사하라 주민투표 감시단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기술통제체제
NATO	North-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NCMA	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y	(한·미) 국기통수 및 군사지휘기구
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동북아협력대화
NEASED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동북아다자안보대화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LL	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NMD	National Missile Defense	국가미사일방어체계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OAU	Organization for African Unity	아프리카단결기구
OPCW	The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화학무기금지기구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안보협력기구
PKF	Peace-Keeping Forces	평화유지군
PKO	Peace-Keeping Operations	평화유지활동
PPC	Pearson Peacekeeping Center	평화유지교육원
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미국의) 4개년 국방기획서
RFP	Request for Proposal	제안요구서
RIMPAC	Rim of the Pacific Exercise	환태평양훈련
ROKFC	ROK Funded Construction	주한미군의 비전투 군사시설 건설비
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 Integration	연합전시증원(수용, 대기, 전방 이동 및 통합)연습
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미) 안보협의회의
SLOC	Sea Line of Communications	해상교통로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SPF	South Pacific Forum	남태평양협의회의
SSC	Small Scale Contingency	소규모 분쟁
START-I, II, III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I, II, III	(미·러간의) 제1,2,3차 전략 무기감축협정
TACC	Theater Air Control Center	전구항공통제본부
TPFDD	Time Phased Forces Deployment Data	시차별 부대전개 제원
TMD	Theater Missile Defense	전구미사일방어체계
TOR	Terms of Reference for the Military Committee and ROK/US CFC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권한 위임 사항)
TS	Team Spirit	팀스피리트 훈련
UFL	Ulchi Focus Lens	울지 포커스렌즈(연습)
UNCAR	United Nations Conventional Arms Register	유엔재래식무기 등록제도
UNMOGIP	United Nations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Pakistan	인도·파키스탄 유엔 정전 감시단
UNOMIG	United Nations Observer Mission in Georgia	그루지아 유엔정전 감시단
UNTC	United Nations Training School Military College in Ireland	유엔교육대
UNTSO	United Nations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유엔정전감시기구
VEREX	Verification Experts Group	정부전문가회의
WAN	Wide Area Network	광역전산통신망
WTO	Warsaw Treaty Organization	바르샤바조약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내용누락

여 백

제1장 세계 안보정세

제1절 안보정세 개관

세계 안보정세는 탈냉전 후 화해 분위기 확산과 협력 증진이라는 안정지향적 측면과 지역분쟁의 증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 불안정한 상황이 혼재되어 있다.

1989년 12월 3일 미국과 소련 양국이 ‘동·서 냉전 종식과 항구적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후, 동구권과 제3세계권에서도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간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냉전기간 동안 잠재되어 있던 분쟁요소들과 새로운 분쟁요인들이 등장하여 세계안보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 즉, 민족, 영토, 종교 등으로 인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고, 핵 및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는 국제적인 군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려국가(State of Concern)들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환경오염, 마약, 테러, 난민문제 등 다양한 초국가적 위협들도 점점 증가되는 상황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은 쌍무적 동맹관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집단안보기구 등을 통하여 세계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등이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다른 입장을 견지하기도 하나, 세계질서를 안정시키려는 미국의 역할은 지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세계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유엔은 전략 및 재래식 무기 감축을 위한 다양한 협상 및 조약의 체결, 그리고 이의 철저한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화유지활동(PKO)을 통해 실질적인 평화유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2절 새로운 위협과 도전

1. 안보개념의 다양화와 초국가적 위협 확산

탈냉전 이후의 세계는 민족·영토·종교 갈등·자원·환경문제 등으로 분쟁요인이 다양화되고, 경제·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국익 추구 및 국제경쟁력 확보가 국가생존 및 번영의 핵심요소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치·군사 위주의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비군사적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즉, 무역·금융·기술·정보·환경·복지·문화 등 비군사적 측면이 국가의 주요 안보목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못지 않게 경제성장 후퇴 등 경제위기·환경오염·자연재난·마약·조직 범죄·컴퓨터 범죄 등 다양한 위협요소들이 개인은 물론 단체, 국가 나아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적 위협요소로 확산되고 있다.

2.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위협의 확산

세계 각국은 미래의 전쟁이 첨단과학기술전으로 발전됨에 따라 군사과학기술력의 향상에 주력하는 동시에 첨단무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요 군사 선진국들은 미래전이 사이버전(Cyber Warfare) 및 고도의 C4ISR전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하여, 자국의 첩보 수집·생산 및 전파 기능을 보호하고, 가상 적국의 이와 같은 능력을 파괴 또는 무력화할 수 있는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능력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장거리 초정밀 타격 능력, 실시간에 전장 상황을 지휘관들이 직접 확인하여 임무를 지시할 수 있는 C4ISR 능력, 나아가 우주 공간의 군사적 활용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군사과학기술의 발전 및 새로운 전쟁 양상의 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대규모 전쟁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핵 및 화학/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의 확산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폐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및 생산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98년 5월에 이어 1999년 4월 또 다시 경쟁적으로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하였다. 또한 북한, 이란, 이라크 및 시리아 등 소위 우려국가들이 핵 및 장거리 탄도 미사일 능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듯 많은 국가들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와 있으며 개발에 필요한 부품 또한 국제 암거래를 통해 쉽게 획득하고 있다. 특히, 생화학무기는 제조가 쉽고, 생산 비용이 저렴하므로 다수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테러집단들도 손쉽게 보유할 수 있어 세계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3. 지역 분쟁과 갈등

오늘날 세계 각 지역의 분쟁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

가 많으므로, 국제사회가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9년 말 현재 83개의 분쟁이 진행되었고(부록1 참조), 이 가운데 18개 분쟁은 한해 동안 적어도 1천명 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한 분쟁으로 평가된다. 2000년에도 시에라리온 내전,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등 전세계적으로 45개 분쟁지역에서 유혈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1999년 유럽지역에서 진행된 13개 분쟁 중 2개가 충돌분쟁이며, 대부분의 분쟁들은 탈냉전 이래 체제 전환과정을 겪고 있는 동유럽의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는 다양한 민족 구성에서 비롯된 종교·문화적 반목 등 국내 정치·사회적 갈등과 복잡한 국제적 배후 지원관계 등으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는 내전을 계속하고 있다.

‘코소보분쟁’은 NATO가 무력 개입함으로써 국제문제로 비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방과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구사회주의 국가간 이견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999년 6월 10일 세르비아측이 유엔의 ‘코소보평화안’을 수락하고, 7월에는 서방 선진국들이 ‘남동유럽안정화협약’을 체결하여 코소보의 평화정착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민족간 갈등으로 야기된 코소보분쟁은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구소련지역 역시 제2차 러시아-체첸사태 이외에도 그루지아-압하지아 분쟁, 타지크 내전 등 이민족간의 역사적 반목과 대결이 상존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분쟁은 식민유산, 종교, 분리독립운동과 관련이 깊으며 스리랑카내전, 아프가니스탄 내전 등이 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가 독립함으로써 여타 지역의 분리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필리핀에서는 국내정국 불안과 동티모르 독립의 영향으로 반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인도·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하는 서남아 지역정세는 양국간에 상호 무력충돌 방지 및 신뢰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라호르 선언’을 채택(1999. 2)하였으나, 1999년 카길 사태 이후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타밀족의 분리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스리랑카의 내부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동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뿌리깊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해결방법에 불만을 가진 세력에 의한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경제 제재 및 대량살상무기 사찰 등으로 이라크와 서방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란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은 전세계 분쟁의 약 1/3(27개)이 전개되고 있는 곳으로서, 동지역 53개국의 절반이 분쟁에 연루되어 있다. 동 지역분쟁의 약 70~80%는 1960년대

서구제국으로부터 독립된 후 정파간 또는 종족 및 부족간 정권 쟁탈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시에라리온 내전,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등 충돌분쟁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한편, 미주 지역에서는 4개의 분쟁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평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1999년 동안 특기할 만한 무력충돌이 없었던 멕시코 내전과 정부군의 적극 대응으로 반군 세력이 급격히 약화된 페루 내분은 폭동이나 테러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콜롬비아내전은 마약조직과 연계된 좌익세력과 우익정부간 극한대립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어 미주지역에서 최대 분쟁지역으로 평가된다.

제3절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

1. 유엔의 역할과 기능 확대

1945년에 출범한 유엔은 냉전시기 동안에는 회원국간의 이념 대립으로 인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유엔의 권능이 회복되면서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평화유지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활동범위도 분쟁의 예방, 평화협상 타결에 유리한 환경조성, 포괄적인 합의 이행 감시, 인도주의적 구호품의 전달 및 정전 집행활동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군축활동도 유엔을 중심으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생산과 국제적 이전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발·생산 통제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한연장, 미사일기술통제체계(MTCR)를 위한 국제협조체제 강화,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발효,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검증의정서 협상 등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제적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바세나르 체제, 미사일기술통제체계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물품, 기술 및 장비의 공급을 막는 각종 수출 통제체제의 결성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최근 유엔은 재정상의 어려움과 안보리의 제도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유엔의 재정을 개혁하여 자국에 대한 예산 분담률을 낮추려고 시도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독일은 자신들의 재정 분담에 상응하는 유엔 내 위상 확보의 일환으로써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회원국들은 새로운 국제 현실을 반영하여 안보리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인

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안보리 확대 범위 및 거부권 부여 문제는 회원국간의 의견 상충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 전략 및 재래식 무기 감축

전략 및 재래식 무기 감축을 위하여 미국과 러시아는 ‘제1·2차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I·II)’ 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구 바르샤바조약기구(WTO)는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조약(CFE)’ 을 체결하였다.

제1차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I : 1991년 7월에 체결, 1994년에 발효)은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1년까지 미·러 양국은 전략 핵미사일을 1,600기, 핵탄두는 6,000발 이하로 감축할 전망이다. 또한, 2000년 4월 19일 러시아 연방의회가 ‘제2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II)’ 을 비준함에 따라 2007년까지 미·러 양국은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전량 폐기하고 핵탄두를 3,000~3,500발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러 양국은 핵탄두를 1,500~2,500발 수준으로 추가 감축하기 위해 ‘제3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III)’ 을 협상중이다.

1990년 11월 19일 NATO 16개국과 구 WTO 14개국이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조약(CFE)’ 을 체결한(1992년 7월 발효) 이래 유럽에서는 재래식무기의 감축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1999년 11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정상회의는 재래식무기에 대한 기존의 NATO와 WTO간의 집단적 보유상한을 국가별 보유상한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중부유럽국가의 전차, 전투기, 대포 등 재래식무기를 10% 추가 폐기하고, 2001년 중반까지 러시아의 4개 군사기지 중 2개를 해체하여 주둔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기로 합의하였다.

3. 안보대화 및 지역안보협력체제의 활성화

안보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간의 지속적인 안보대화과 지역안보협력체제의 활성화는 정치·군사적으로 신뢰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지역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인사 상호방문을 통한 안보대화 및 미·러 국방부간 핫라인의 운영 등은 정치적 신뢰구축과 세계안보정세를 안정시키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아·태 지역은 강대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하는 곳으로, 쌍무적 안보대화가 지역 안보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우려와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관련국가들은 보다 활발한 쌍무적 접촉과 대화를 통해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한국, 일본, 러시아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의 소극적 반응으로 성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은 1994년 이래 역내 신뢰구축 제고 및 예방외교를 위해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2000년 7월 북한이 가입함으로써 아·태 지역내 유일한 정부간 다자안보협의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 외의 각 지역에서는 현지 상황에 부합되는 다양한 다자안보협력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제2장 동북아 안보정세

제1절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갈등

동북아 각국은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지역분쟁을 억제하고 불안정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각국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가며 협력과 견제를 통하여 자국의 안보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동맹체제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푸틴대통령은 강력한 러시아의 부활을 목표로 보다 적극적인 군사외교정책을 전개하여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를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일과 중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 및 ‘미·일 전구미사일방어체계(TMD)’ 공동연구 등으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러시아도 중국과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즉, 중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으로 유사시 대만해협에 대한 미·일의 개입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일본의 역내 안보역할이 증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대만이 미국 주도의 동북아지역 TMD 구상에 포함되는 것을 중국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여, 체제구축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미·일·중·러 4국은 사안에 따라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동북아 안보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는 동북아 정세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1999년 5월 발생한 유고 주재 중국 대사관에 대한 NATO기의 오폭사건과 미국의 핵기술과 중성자탄 기술을 중국이 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미 하원의 ‘코스보고서’는 양국관계를 악화시켰다. 또한, 미국 의회는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을 골자로 하는 ‘대만안보강화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대만문제는 미·중간 주요 마찰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미·중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하는 쌍무협상을 타결하고, 단절되었던 군사교류를 재개하는 등 협력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관계는 경제협력이나 지역안정과 같은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조기 가입을 지지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를 확대시

키고 있으나, 센카쿠(釣魚台)열도 등 영토문제에 있어서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으며,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측면에서 상호 경계하는 입장에 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지역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사력 감축은 지역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과 러시아는 냉전 종식 이후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하시모토-엘친 플랜에 따라 북방도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양국간의 평화협정 체결, 경제협력 구상 등 다양한 대안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지역은 상호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이 진행되는 한편,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의 적극적인 전방위 외교 등 개혁·개방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등의 주요현안이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불안정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행히, 2000년 6월 분단 55년 만에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다방면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증가되고 있어 전 세계가 북한의 움직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제2절 주변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주변 4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세계전략을 동북아 정책에 철저히 반영하려는 의지하에 자국이 처한 국내·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 강화, 세계 경제번영 지원 및 해외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군사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 ‘개입 및 국제지도력 유지(Engagement & Leadership Abroad)’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지역패권주의를 방지하고, 지역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기존 쌍무동맹관계를 기반으로 한 다자간 안보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최대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 현 수준의 미군을 지속 주둔시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 및 일본과의 공조하에 대북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동북아에는 아직도 역사적 다양성과 대규모 군사력 등으로 인해 잠재적 분쟁 위협이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미·일 안보체제를 축으로 역내 국가간 적극적인 안보 대화 및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전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

하다고 인식하고,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한·미·일 공조하에 동북아 안보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일·북 국교정상화 회담의 적극 추진 등 대북관계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 역내 국제질서에서 미·일 동맹체제의 강화를 경계하면서, 경제력 신장에 따른 군 현대화와 지역 중심국가로서의 위상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국은 한반도를 대외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간주하고 남북한 등거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는 경제협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정치·군사적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북한과는 경제지원과 전통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전략적 비중을 과거보다 높게 평가하여 동북아 지역의 긴장완화를 지원하고,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가운데,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국가미사일 방어체계(NMD) 구축 등 국제문제 및 지역분쟁에서의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중·러 양국 간 공조체제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동북아 안보문제 협의를 위한 4자회담에 일·러가 추가 참여하는 6자회담의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러시아의 적절한 역할과 기여를 추구하는 것이다.

제3절 주변국의 군사정책 및 군사동향

1. 미국

가. 국방정책

미국 국방정책의 기초는 세계평화유지와 자국의 국익에 유리한 국제안보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다.

동북아는 세계 최대의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강대국간 견제와 협력이 공존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중국·대만의 양안관계 등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쌍무동맹관계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전쟁을 억제하는데 국방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보유를 동북아 지역안보의 최대 위해요소로 간주하고 동북아 주

둔 미군 및 우방국 방어를 위한 ‘전구미사일 방어체계(TMD)’를 구상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이미 1999년부터 TMD 공동연구를 시행 중에 있다. 더욱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가 머지 않은 장래에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국가미사일방어체계(NMD)’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9월 1일 NMD체계 기술에 대해 충분한 신뢰를 갖게 될 때까지 배치를 추진하지 않고, 배치 결심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 중국, EU 국가들은 환영을 표시했으며,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 포기를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군사동향

동북아지역 내에 배치된 미군 전력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방위를 지원하는 한편, 태평양상의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를 주임무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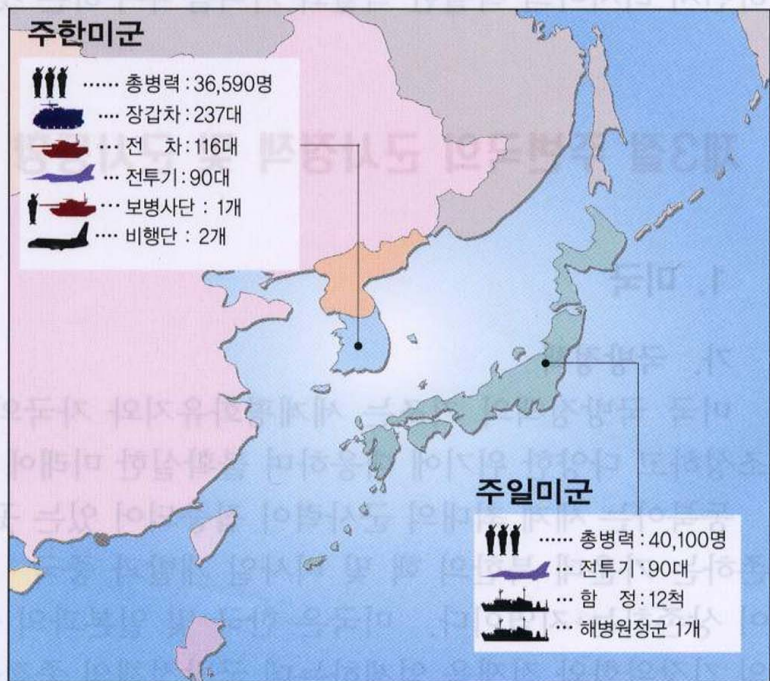
미국은 동북아지역의 안보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 태평양 사령부를 주축으로 신속대응군 운용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제 7함대에는 키티호크 항모전투단을 배치 운용하고 있다.

1999년 초, 유고 공습기간 중 키티호크 항공모함의 걸프만 이동으로 인해 미 군사전략의 핵심인 ‘윈-윈전략(Win-Win Strategy)’ 수행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자, 미국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미국 본토 전력의 즉각 출동태세 유지를 지시하였다. 동시에, 한반도에 추가로 전력을 전개함으



▲ 미국의 키티호크 항공모함

[도표 1-1] 미국의 동북아 지역 주요 군사력 현황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9. 10)

로써 동북아시아의 전력을 보완하고 2개 주요전구에서의 '원-원전략' 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보스니아, 코소보사태와 같은 소규모 분쟁(SSC : Small-Scale Contingency)개입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00년 6월 미합참에서 발표한 장기전력구상 'Joint Vision 2020' 에 따르면, 미국은 '우세한 기동, 정밀교전, 집중적 군수지원 및 완벽한 방호' 의 4대 전장 운영개념을 축으로 모든 영역에서의 절대 우위를 확보하고, 급변하는 정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보작전 능력의 강화 및 보다 효율적 작전 운영을 위한 합동군사력 구축계획에 주력할 계획이다.

2. 일본

가. 방위정책

일본은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견지, 적절한 방위력 정비 및 국제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국가안전보장의 주요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일본 방위력 증강계획은 1995년 11월에 발표된 '신방위계획대강' 에 담겨 있다. 아울러, 1996년 4월에는 '미·일 안전보장공동선언' 을 발표하여, 21세기를 향한 미·일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재정 의하고 일본의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기초할 것이라는 것을 재천명하였다.

일본은 1997년 9월에 개정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의 후속조치로서 1999년 5월에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뿐만 아니라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변사태시에도 일본이 실시하는 조치와 절차를 정하는 '주변사태법(1999년)' 을 제정하는 등 관련법을 정비하여 미·일 안보조약의 실효성을 보장하였다.

또한, 일본은 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 군사력 정비 등에 따른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군사적으로 상호 신뢰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군사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98년 북한의 위성발사 주장에 대해 이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 식량지원과 전세계 운항을 중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으나, 1999년 미·북 미사일회담의 진전에 따라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일·북 국교정상화 회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나. 군사동향

일본의 방위태세는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기조로 하여, 평시에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주변국과는 안보대화 및 교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사태시에는 미·일간 공동작전 및 상호협력 계획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관련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일본은 1976년 처음으로 '방위 대강'을 발표한 이후 매 5년 단위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방위력을 건설해 왔으며, '2001-2005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조기경보기(AWACS) 운용의 본격화, 공중급유기 도입, 장거리 대형수송기 및 수송함 건조 등을 계획하고 있어 주변국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

현재 자위대는 육상자위대의 편제와 기능의 개편, 해상자위대의 기동전력 향상, 항공자위대의 신형 전투기 배치, 그리고 사이버테러 대책 강구 등 합리화·효율화·컴팩트(Compact)화를 진전시키면서 필요한 기능의 충실과 방위력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및 의아 선박 사건(1999. 3) 이후 신형 미사일함정 도입을 비롯하여 초계헬기 부대의 특별경비대를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대게릴라부대 신편 검토 및 생·화학전 대비능

[도표 1-2] 일본의 주요 군사력 현황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9. 10)

력 제고, 정찰위성의 4대 도입 및 운용(2002년 목표) 등 독자적 정보능력 및 작전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적 역량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8년에는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온두라스에 육상자위대 의료진을 파견했으며, 1999년에는 동티모르 사태시 난민지원을 위해 수송기를 파견하는 등 유엔 중심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역할과 임무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3. 중국

가. 국방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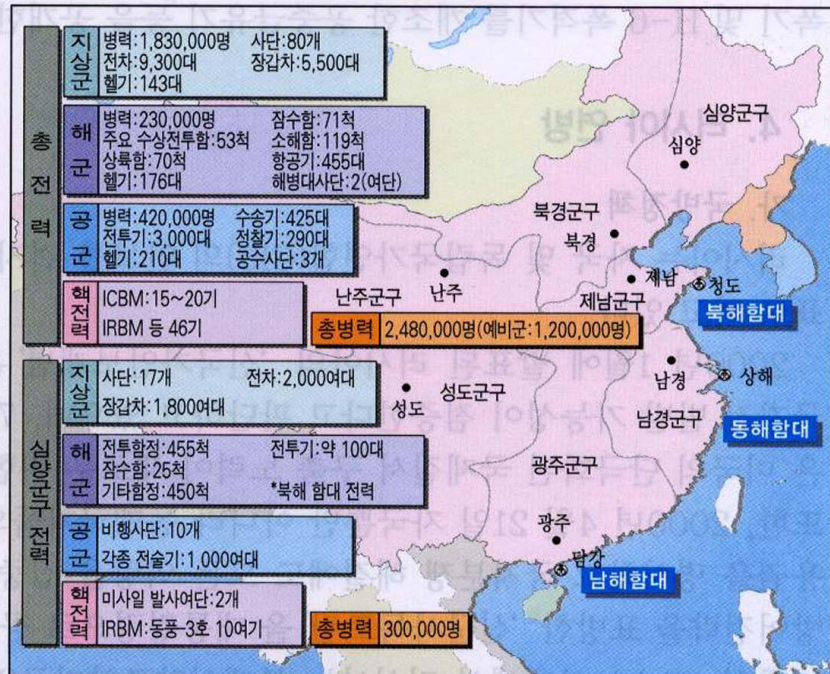
중국은 방어적 국방정책을 견지하면서 타국을 침범하지 않되, 일단 침략을 당했을 경우에는 반격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적극적 방어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양(量)으로부터 질(質)'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대전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기술 조건하의 국지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략미사일 및 해·공군을 중심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전구미사일 방어체계(TMD) 계획에 대만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국 주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중국의 통일노력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나. 군사동향

[도표 1-3] 중국의 주요 군사력 현황

중국은 2000년 3월에 개최된 제9기 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약 146억달러의 국방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2.7%가 인상된 것으로 1989년 이래 12년 연속해서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 현대화 사업은 육군의 경우 신형전차 도입, 다련장 로켓포의 확충, 공격 헬기사단 창설 등 기동력 및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9. 10)

화력 증강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지 제한전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속 대응부대와 긴급 전개 부대를 편성·운영하고 있다.

해군은 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메니' 급 구축함과 킬로(Kilo)급 잠수함의 추가 확보로 원양작전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공군은 러시아로부터 SU-27/30을 비롯한 최신예 전투기 도입과 기술이전을 통한 면허생산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조기경보기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핵 및 미사일에 대한 기술개발과 전자전에 대한 집중 연구 등으로 전략무기 및 사이버전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1999년까지 군병력 50만명 감축계획을 완료하여 약 250만명으로 병력을 재편하였으며, 1999년 10월 1일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일에는 군사퍼레이드에서 중국이 자체 개발한 DF-31형 ICBM, T-90 II형 전차, FBC-1 해상작전용 전폭기 및 H-6 폭격기를 개조한 공중급유기 등을 공개한 바 있다.



▲ 중국의 DF-31형 ICBM

4. 러시아 연방

가. 국방정책

러시아는 자국 및 독립국가연합(CIS)의 안보를 견지하는 것을 국가안보의 주요목표로 하고 있다.

2000년 1월에 발표된 러시아의 '신국가안보개념'은 대규모 전쟁 가능성보다는 국지전 발발 가능성이 점증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7월 10일 발표된 '신외교정책'은 미국의 단극화된 국제질서 구축 노력이 새로운 위협 및 도전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00년 4월 21일 자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가들의 국가안보 위기 발생시 핵사용권을 명시하고 국지분쟁 해결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공세적 방어전략을 표방한 '신군사독트린'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였다.

특히, 코소보사태에서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고 공습을 반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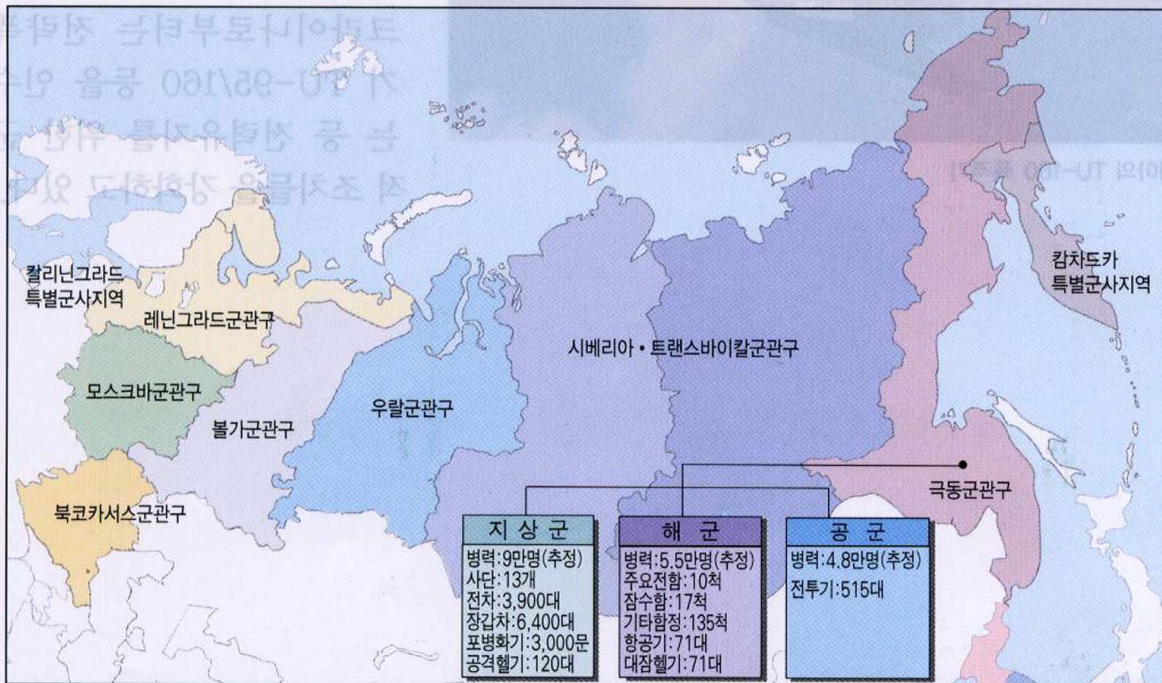
고 공습 종료후 코소보 평화유지군에 참여함으로써, 러시아가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또한 러시아는 NATO가 동유럽 3국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킨 이후에도 동진을 지속하는 데 대해 저항하는 한편, 미국이 추진중인 NMD 구축에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에 의한 세계질서 주도를 견제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인도와는 장기 '군사기술협력의정서'를 체결하는 등 국제적 위상회복과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나. 군사동향

러시아는 1998년 8월 '2005년까지 군건설에 관한 국가정책 개념' 및 12월 '러군 개혁법안'과 2000년 11월 '국가안보회의(NSC)'의 결정에 따라 군사력 건설과 국방조직 및 각군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즉, 2005년까지 약 85만명 규모로의 병력감축을 지속하면서 7개 군관구를 6개 군관구로, 현 4군체제(지상·전략·해·공군)를 정예화된 3군체제(지상·해·공군)로 전환하되, 핵 억제력은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도표 1-4] 러시아의 극동지역 군사력 현황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9. 10)

러시아는 재정난으로 인한 국방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첨단장비 개발에 주력하면서, 선진기술 및 무기체계를 수출하기 위해 방산담당 부총리를 임명하고 '대외 군사 기술협력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산무기 수출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국가차원의 무기수출 확대전략에 힘입어 중국·중동 및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이 1999년도 35억불에서 2000년도에는 43억불로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등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군은 NATO의 동구 확대에 따른 완충지대의 상실과 유고공습과 같은 위협에 대비하여 1999년 '서쪽으로부터의 침공'을 가정한 최대 규모의 'West -99'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1999년 11월 당시 총리였던 '푸틴' 대통령의 태평양 함대사령부 방문을 통해 극동함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클레바노프' 부총리가 해군전력 증강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지난 10년간 예산난으로 지속적인 전력 약화에 시달려온 해군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 러시아의 TU-160 폭격기

전략무기의 경우도 양적으로는 감축시키고 있지만, TOPOL-M 차세대 미사일을 개발하여 1998년 12월 이후 실전배치를 계속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로부터는 전략폭격기 TU-95/160 등을 인수하는 등 전력유지를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 (연간 군사평형지수) 1999. 10

제3장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하여 법적·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군부 중심체제를 구축하여 대내·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1월 1일 신년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당 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에서 사상·총대·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강조하였다. 이는 인민군대를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의지하에 경제난이 사회주의 건설 및 국가안보에 최대 장애임을 인식하고 모든 국가 역량을 경제 회생에 두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우리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화해협력정책에 호응하여 2000년 6월 13~15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최근 전방위·실리 위주의 대서방 외교 활동을 통해 국제무대 진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 화해분위기와 적극적인 외교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했다거나 대외 개방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이르며,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는 아직도 우리 군에 비해 약 2배의 양적 우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999년 6월 연평해전 이후 군사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장사정포 생산, 전투기 및 헬기 도입, 소형 잠수함 건조 등 전력증강과 미사일 궤도 진지공사를 비롯한 전투준비태세의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상 무장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접경지역에서의 대남 비방방송 중지 등 일부 변화된 활동 외에 기타 내부적 군사활동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제1절 북한의 실상과 일반정세

1. 북한의 내부정세

북한은 2000년 4월 4~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회의를 개최하여 예산안 및 주요 법안을 승인하는 등 입법기능을 회복시키고, 2000년 신년 공동사설과 각종 언론 보도매체를 통해 당 창건 55돌을 계기로 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운영체제와

내용누락

내용누락

되었다.

중국과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으나 최근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북한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였으며 5월 29일에는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과 경제 지원문제에 대해 협의하였고, 10월에는 중국 츠하오티엔 국방부장이 6·25전쟁 참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등 고위급 인사의 상호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2000년 2월 '신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한데 이어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복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기타 대 서방국가들과의 수교 확대를 모색하고 제3세계 및 비동맹권 국가를 대상으로 친선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2000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정식 가입하는 등 다자안보협의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3. 북한의 대남정책

북한의 대남정책은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6.15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남 적화 전략 노선의 폐기 등 근본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 등 민간분야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에도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선언(1999.9)과 서해 5도 통항질서 공포(2000. 3)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일관된 화해협력정책에 호응하여 왔으며 당면한 경제회생과 국제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해 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남 비방 중단, 북방한계선을 월경한 우리 어선의 조속한 송환 등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 교환 방문, 남북 장관급회담 및 국방장관회담, 언론사 사장단 방북 초청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고,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가 보안법 폐지와 유엔사 해체 등을 주장하며 종전의 통일전선 형성 전략을 계속 구사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북한의 노동당 규약 전문에 명시된 전한반도 공산화 목표를 포기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남북간 신뢰 구축과 관계 개선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제2절 북한의 군사정책 및 전략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군사적으로 아직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당규약에 명시된 ‘한반도의 적화전략’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중 : ‘조선 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북한은 이미 1962년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여 장기간에 걸쳐 전쟁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공언한 바 있다. 1998년 9월에 개정된 헌법에서도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기본으로 한 ‘4대군사노선’을 국가적 수행과제로 명문화하였다.

북한 헌법 제60조 :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

북한이 한반도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현재의 군사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군사력을 체제유지를 위한 최후의 핵심 보루로 인식하고 대남 및 대외협상 수단으로 최대한 이용하면서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무력혁명의 주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북한의 대남군사전략은 ‘초전 기습공격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기계화 및 자주화된 기동부대로 전과 확대를 실시하여 속전속결을 기도하는 한편, 정규전 및 비정규전의 배합으로 동시 전장화하여 미 증원군의 도착 이전에 남한 전역을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전략’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하여 경제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자원의 우선권을 군사부문에 부여하여 전력증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장거리 포병부대와 기계화부대 등 주요 전력의 55% 이상을 전방지역에 추진 배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년 4월 최고인민회의 10기 3차회의에서 2000년도 국방비를 국가 총예산의 14.5% 수준인 13.6억불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과거 북한이 발표했던 군사비 규모와 전력증강 실태, 군사력 운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군사비는 총 예산의 30% 이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군사비는 국가예산에 편성된 국

방비뿐만 아니라 이른바 제 2경제로 불리는 군수경제 운영체제를 통해서 조달되며 무기수출, 직영무기 생산, 군부대 자체 외화벌이 사업 등 독자적인 군 회계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면에서도 인건비, 토지, 공공요금 등이 무상이거나 저렴하다. 따라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군사비보다 높은 수준의 전력증강이 가능하며, 실질 구매력을 우리 군과 비교해 볼 때 동일 규모의 군사비로 3배 이상의 전력증강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북한의 군사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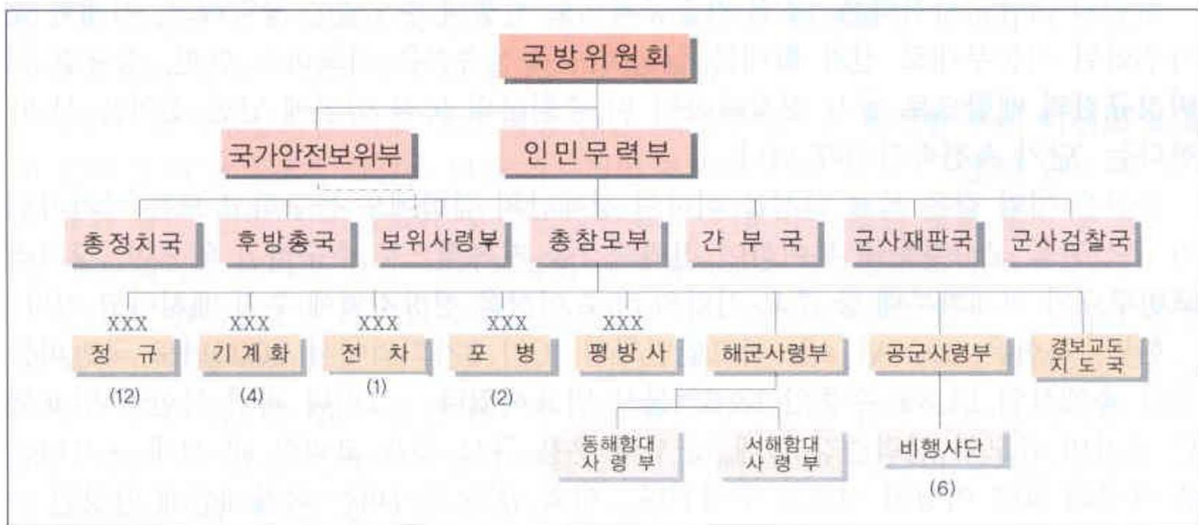
1. 전쟁지도 및 군사지휘기구

북한의 전쟁지도 및 군사지휘의 최상위에는 도표 1-5와 같이 전반적인 국방사업을 결정하고 지도하는 독립된 국가 권력기구로서 '국방위원회'가 있으며, 그 예하기구로 인민무력부가 편성되어 있다.

1998년 9월 5일 헌법개정을 통하여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 기구이자 전반적인 국방관리기구로 강화되었고, 국방위원장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 최고직책'으로 격상되었다.

[도표 1-5]

북한의 군사지휘체제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겸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의 무력 일체를 직접 장악하고 있으며 전쟁 및 중요한 군사작전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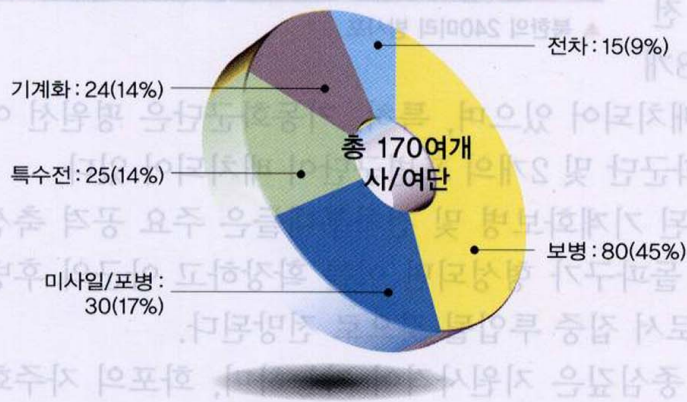
인민무력부는 군사집행기구로 외형적으로는 도표 1-5와 같이 총정치국, 총참모부를 비롯한 기구들을 통하여 정규군의 군무를 총괄·집행하고 북한군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군정권(軍政權)만 행사하고, 총참모부가 실질적으로 군사작전을 지휘·관장한다.

2. 북한군의 편성, 장비, 배치

가. 지상군

북한 지상군은 4개 야전군급 전방군단, 4개 기계화군단, 1개 전차군단, 2개 포병군단을 포함한 총 20개 군단과 특수전부대를 관장하는 경보교도 지도국으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전투부대는 80개 보병사단/여단, 30여 개 포병여단, 15개 전차여단, 24개 기계화여단, 25개 특수전여단 등 총 170여 개 사/여단으로서, 병종별 전투부대 구성비는 도표 1-6과 같다.

[도표 1-6] 북한 지상군의 주요 전투부대 구성비



북한 지상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장비 현황은 도표 1-7과 같다. 이 중 전차는 아직까지 구식인 T-54/55/59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주포구경이 향상된 T-62, 천마호 전차를 자체 생산하여 전방지역과 평양일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전차들은 자체 스노클 장치를 이용하여 수심 5.5m까지 도하할 수 있다.

포장갑차는 BTR계열 및 M-1973형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경전차 수준의 성능을 갖춘 BMP계열의 장갑차가 새롭게 보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구경과 사거리의 야포는 50% 이상이 자주화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을 최단시간내에 공격할 수 있는 방사포(107밀리부터 240밀리)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 방공무기 또한 14.5밀리부터 100밀리까지의 다양한 고사포와 SA-7 대공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도표 1-7] 북한 지상군의 장비 보유현황

				
전 차	장 갑 차	야 포 (방사포 포함)	방공무기	도하장비 K-61/S형부교
3,800여대	2,300여대	12,500여문	13,800여문	760여대 / 2,200여대

특히 전방군단과 공병국은 수륙양용 차량인 K-61과 조립식 S형 부교 등의 도하장비를 보유하여 대부분의 하천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10여개 군단, 60여개 사단/여단을 전진배치시켜 언제라도 부대배치의 조정없이 기습 남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전방에 4개 군단, 중부 및 평양지역에 8개



▲ 북한의 240밀리 방사포

군단, 후방지역에 8개 군단이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기동화군단은 평원선 이남지역에 1개 전차군단, 2개의 기계화군단 및 2개의 포병군단이 배치되어 있다.

군단부터 여단까지 다양하게 편성된 기계화보병 및 전차부대들은 주요 공격 축선상에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일단 돌파구가 형성되면 이를 확장하고 아군의 후방 깊숙이 침투하는 중심기동 작전부대로서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병부대는 견고한 갱도진지에서 중심깊은 지원사격이 가능하며, 화포의 자주화로 기동성 있는 화력지원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방사포에 의한 대량 집중사격이 가능하다.

또한 도하공병은 수륙양용차량과 조립식 부교장비를 운용하여 병력과 장비를 포함한 부대의 강습도하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약 10만 여명에 달하는 특수전부대는 유사시 전·후방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하여 지휘 및 통신시설 파괴, 병참선 차단, 비행장 등 주요시설 타격, 요인 암살 등으로 우리의 전쟁지속능력을 파괴하고 후방지역을 교란하는 등 전후방 동시 전장화를 기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모든 전선에 걸쳐 땅굴을 굴착해 놓고 사전에 휴전선 일대의 장벽을 회피하여 대규모의 부대를 은밀히 침투시킨 후 전면적인 기습공격을 실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휴전선 지역에는 20여개의 땅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우리 군이 발견한 4개의 땅굴들은 모두 전선지역의 주요 접근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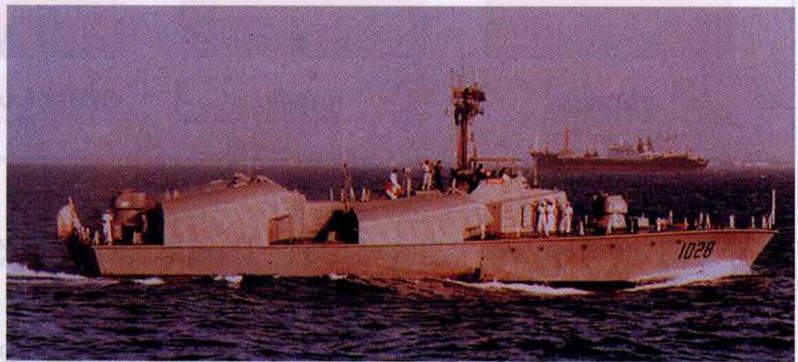
나. 해군

북한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 2개 함대사와 16개 전대 및 2개의 해상지격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함정 보유현황은 도표 1-8과 같다.

[도표 1-8] 북한 해군의 함정 보유현황



전투함정 중 경구축함,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의 수상전투함은 대부분 소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투함정은 약 60%가 전방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으며, 이 중 40여 척의 유도탄정은 사정거리 46Km의 대함 STYX 미사일 2~4기를 장착하여 아군의 대형함정에 대한 유도탄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매우 위협적이다.



▲ 북한의 유도탄정

로미오급 및 상어급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50여 척의 잠수함은 한반도 전 해역의 해상 교통로 교란, 수상함 공격, 기뢰 부설 및 특수전 부대의 침투지원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원함정은 상륙함, 고속상륙정, 공기부양정 등의 상륙함정과 소해정, 해상경비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함정은 원해작전에 제한을 받는다.

해군은 2개의 해상저격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1척당 1개 소대 규모의 무장병력을 승선시켜 목표지역에 기습상륙시킬 수 있는 140여척의 공기부양정을 자체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다. 공기부양정은 갯벌에서도 기동이 가능하므로 동·서해안 대부분의 지역에 접안할 수 있으며, 50노트 이상의 고속기동 능력이 있어 전쟁 초기에 동시다발적인 기습상륙용으로 운용될 수 있다.

또한 동·서해안에 사정거리가 95Km에 달하는 실크웜(SILKWORM)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전방에 배치된 실크웜 미사일은 서해의 덕적도와 동해의 속초·양양까지 대함공격이 가능하다.

다. 공군

북한 공군은 공군사령부 중앙 통제하에 3개의 전투/폭격기 비행사단, 2개의 지원기 비행사단 및 1개의 훈련비행사단을 포함 총 6개 비행사단과 1개의 헬기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기 보유현황은 도표 1-9와 같다.

[도표 1-9]

북한 공군의 항공기 보유 현황



항공기 전력구성은 MIG-15/17, IL-28 등 구형 전투/폭격기가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MIG-19/21이 주력기종으로서 양적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MIG-23/29 및 SU-25 등 신예 전투기를 일부 보유하고 있다. 1999년도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MIG-21기 40여대와 러시아로부터 MI-8헬기 여러 대를 도입하였다. 단계적인 항공산업 육성 추진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에는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받아 MIG-29 신예 전투기를 조립 생산한 바 있다.

북한 공군은 2개의 공군저격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300여대의 AN-2기는 저공·저속 비행을 통해 유사시 후방 깊숙이 특수전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전투기의 약 40%가 전방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어 단시간에 우리나라 전 지역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여 개의 작전기지 외에도 전

시 생존성을 고려하여 예비 및 비상활주로를 포함한 70여개의 비행기지를 전·후방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한편, 평양권 및 주요 핵심시설을 포함한 북한 전지역에 조기경보 및 방공감시레이다, 저고도 대공포, 중·고고도의 지대공미사일 등을 밀집 배치하여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



▲ 북한의 MIG-29 전투기

라. 예비전력

북한은 사회 전체가 거대한 병영체제로서 1960년대 초부터 4대 군사노선을 강력히 추진하여 전 인민을 무장화함으로써 대규모의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단기간 내에 소집할 수 있는 동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14세부터 60세까지 전 인구의 약 30%를 동원 대상으로 하여, 현재 748만여 명의 예비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15~30일간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 예비전력의 구성은 전투 동원대상인 교도대가 173만여 명(남자:17~45세, 여자:17~30세), 민방위대 성격의 노농적위대가 414만여 명(46~60세의 남자 위주), 고등중학교 군사조직에 해당하는 붉은청년근위대가 118만여 명(14~16세, 4~6학년), 기타 준군사부대로 인민보안성 및 안전원, 군수동원총국, 속도전 청년돌격대, 호위사령부 등을 합하여 약 43만여 명이다.

동원체제면에서 보면, 인민무력부가 직접 통제하는 교도대는 부대단위로 즉각 동원 및 전투투입이 가능하며, 당 민방위부가 통제하는 붉은청년근위대와 노농적위대도 당의 지시에 따라 단기간 내에 동원이 가능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특히 주민의 거주 이전과 직장배치 및 여행을 통제하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예비병력은 상시 동원이 가능한 상태이다.

3.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수준

가. 핵 개발

북한은 구소련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195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모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가채량 400만톤에 달하는 양질의 우라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960년대에는 영변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한 후 구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고 핵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관련기술을 축적하여 왔다.

1970년대에는 일련의 핵연료 순환주기, 즉 연료의 정련, 변환, 가공기술을 집중 연구하여 자체기술로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에 성공하였고, 1980년에는 5MW급 연구로(제2원자로) 건설에 착공하였다.

1980년대에는 원자력의 실용화, 핵개발 체계 완성에 주력하여 1986년에 우라늄 정련, 변환시설의 운용을 시작하였고, 1989년에는 태천에 200MW급 원자력발전소를 착공하였으며, 영변에 대규모 재처리 시설의 건설에 착수하고 고품실험을 실시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도의 정밀기술을 요구하는 기폭장치 및 운반체 개발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핵무기 완성 및 보유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핵무기 제조 원료인 플루토늄(Pu) 추출능력을 고려하여 볼 때 북한이 한 두 개의 초보적인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하여 미국은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핵개발 동결의 대가로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고 경수로 1기 완성시까지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공급해줄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12월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어 경수로 건설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2년 1월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임시 및 일반사찰 수용을 발표하고서도 아직까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과 5MW원자로 운전기록의 제출, 시료 채취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2000년 4월 5MW원자로의 폐연료 봉인작업은 완료하였다.

1998년 중반 이후 핵관련 지하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의심받던 금창리 지역은 1999년 5월과 2000년 5월에 실시한 미국의 현장사찰 결과 일단 핵 관련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화학무기

북한은 1961년 말에 화학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김일성의 '화학화 선언'에 따라 연구 및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 무기개발을 시작하였다. 그후 1980년대부터 '독가스 및 세균무기를 생산하여 전투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김일성 교시에 따라 화학무기 개발에 주력하였다.

현재 북한은 8개의 화학공장에서 생산한 신경성, 수포성, 혈액성, 구토 및 최루성 등 유독작용제를 6개의 시설에 분산 저장하고 있으며 보유량은 약 2,500~5,000톤

으로 판단된다. 또한 탄저균 등 생물무기를 배양 및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다양한 화학탄 투발수단을 보유하여 전방지역에는 구경 100밀리 이상 박격포, 야포 및 방사포, FROG 등을 이용하고, 후방지역은 SCUD 및 노동 미사일, 전투기, 폭격기, AN-2기 등을 이용하여 전·후방 동시 화학탄 공격이 가능하며, 아울러 특수부대를 이용하여 후방지역에 생물무기를 은밀히 살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군은 연대급까지 화학소대를 편성하여 화생방 작전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군인은 물론 준군사 부대요원과 민간인까지 화생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화생무기는 생산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이 뛰어나고 증거인멸이 용이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금지추세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으로는 그 능력을 계속 보유하려 할 것이다.

다. 중·장거리 무기

북한은 1980년대 초부터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에 착수하여 이미 구소련제 SCUD-B를 개량하여 사정거리가 500Km에 이르는 SCUD-C를 자체 생산 및 작전 배치하였다. 1993년에는 사정거리가 약 1,300Km인 노동-1호를 시험 발사한 후 1997년에 작전 배치하였고, 1998년 8월에는 변형된 대포동-1호 미사일 운반체에 의한 소형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운반체의 엔진 연소와 탄체의 다단계 분리 등 제반 기능을 이상없이 수행한 점으로 보아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대포동 1·2호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각각 2,000~2,500Km, 6,700Km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국가에도 위협이 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중동지역 및 서남아시아에 수출함으로써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미·북간에는 1996년부터 ‘미사일 기술 통제체계(MTCR)’ 가입과 수출 및 생산 중지문제 등으로 미사일 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8년 8월 대포동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미·북간에 미사일 포괄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1999년 9월 24일 북한 외무성은 미·북 고위급 회담시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2000년 10월 12일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시 합의한 ‘미·북 공동코뮤니케’에서 미사일회담 진행기간 중 미사일 발사유예를 재확인하였다.

북한이 화생무기와 함께 중·장거리 유도무기를 생산·보유하는 목적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편, 체제의 생존을 위한 대외협상용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무기들은 유사시 작전·전술적으로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수도권을 포함한 전·후방의 주요 도시 및 전략표적들을 동시에 공격함으로써 그들의 군사전략인 단기속전속결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제4절 주요 군사동향 및 위협평가

최근 북한군은 지속되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대포동 미사일 개발노력과 함께 장사정포(170mm자주포, 240mm방사포)를 전방지역에 증강배치하는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군은 연평해전(1999.6) 이후 실질적인 전투기량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1999년 하계훈련기를 이용하여 지상군은 포병사격과 기계화부대 기동훈련을 강화하였고, 해군은 해안포, 함포 및 함대함 유도탄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수전부대는 해상 및 수중 침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99년 9~10월에는 인민무력부 주관하에 전군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판정 검열 강화와 아울러 대폭적인 전투장비 정비 등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전투준비태세 수준을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 동계훈련(1999.12~2000.4)에 있어서도 지상군은 포병 실사격훈련과 기계화부대 야외기동훈련을, 해군은 전투준비태세 점검을, 공군은 협동 방공 및 기지전개훈련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전국 규모의 국방지휘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경제난의 영향 및 연평해전 이후 각군별로 실질적인 훈련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7월부터는 실사격훈련 등 일부 훈련이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8월 하순부터는 예년 수준으로 환원되어 일상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군은 최근 이라크와 코소보사태 교훈을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전투준비태세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후방지역에 미사일 갱도진지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전방 및 해안지역에 대한 장애물 보강과 전투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도입한 MIG-21 전투기를 양강도 지역 기지에 작전배치함으로써 동북부지역의 국지 방공력을 강화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전·후방 10개기지에 전투기 240여대를 조정 배치하였으며, 각 비행장 및 방공기지의 대공포 배치도 조정하였다.

또한, 군의 사기와 전의를 고양하기 위해 군부에 대해 자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사령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군부대 방문 등 격려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1999년 2월 전군 중대장 대회에 이어 2000년 2월에는 평양체육관에 전군의 중대정치 지도원들을 소집하여 대규모로 국가표창을 수여하여 충성의 맹세를 강조하였다. 특히 중대단위 전투력을 강조하여 지속적인 군사규정 학습과 사상무장 교육을 강화하고, 군·민 일치운동을 전개하는 등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명령에 복종하는 영군체계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침투용으로 침투용 소형잠수함(정)을 추가 건조하여 배치하고 수중추진기(SBS-2)를 개발 운용하는 한편, 침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침투도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또한 휴전이후 남·북간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9월에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2000년 3월 23일에는 해군사령부 명의로 소위 '서해 5도 통항 질서'를 보도하는 등 긴장을 조성한 바 있다.

북한군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각종 보도매체의 대남 비방 방송 감소, 순화된 용어('괴뢰', '원수' 등 과격한 용어 미사용)의 사용 및 전선지역에 설치된 심리전 입간판 중 '월북환영', '친미매국' 등의 내용을 철거 또는 교체하였다. 또한, 북한 해군은 북한주민의 조업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으로 남하하는 것을 단속하는 등 접경지역에서 외형적인 긴장조성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군은 장기적인 전력증강 및 전투준비태세 보강활동과 침투관련 훈련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협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 백

제2부 평화수호를 위한 국방정책과 태세

- 제1장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 제2장 전쟁억제를 위한 군사대비태세
- 제3장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 제4장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외 군사정책

여 백